지방자치론

- 문 1.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과 그에 근거 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?
 - ㄱ. 지방분권특별법
 - ㄴ.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
 - ㄷ.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
 - ㄹ. 지방자치법
 - A. 지방이양추진위원회
 - B.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
 - C. 지방분권촉진위원회
 - D. 지방자치분권위원회
 - \bigcirc \neg D
 - ② ∟ − C

 - ④ = -A
- 문 2. 조선시대 지방자치에 대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?
 - 해당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심의 한다.
 - 1895년 개화파 정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한 신분차별이 없었다.
 -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.
 -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.
 - ① 향청(郷廳)
 - ② 향약(郷約)
 - ③ 집강소(執綱所)
 - ④ 향회(郷會)
- 문 3. 중앙집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?
 - ① 규모의 법칙 등을 통한 행정의 기계적 능률성 확보에 유리하다.
 - ②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유리하다.
 - ③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.
 - ④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 구현에 유리하다.
- 문 4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(지방의회)과 집행기관(지방자치 단체장)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집행기관우위형의 기관분립형을 유지하고 있다.
 - ② 재의결한 조례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.
 - ③ 의결기관은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.
 - ④ 「지방자치법」제정(1949년)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.

- 문 5.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 개최시마다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·여비·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유급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.
 - ④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.
- 문 6.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?
 - ① 소방서
 - ② 세무서
 - ③ 지방검찰청 지청
 - ④ 경찰서
- 문 7. 중앙 지방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'보충성의 원칙'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기초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직접 처리 해서는 안된다.
 - ②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.
 - ③ 1985년 유럽평의회(Council of Europe)의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반영되었다.
 - ④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한다.
- 문 8.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전국적인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 저해
 - ② 지역주민의 민주적 통제 약화
 - ③ 사무의 일부가 중복되어 비효율 초래
 - ④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
- 문 9.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확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은?
 - ① 조정교부금
 - ② 특별교부세
 - ③ 분권교부세
 - ④ 부동산교부세
- 문 10.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우리나라는 1988년「지방자치법」개정 이전까지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을 택하였다.
 - ② 실제에 있어 개별적 사무배분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더 폭 넓게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다.
 - ③ 사무배분의 방식이 간편하고, 상황에 따른 사무처리 주체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.
 - ④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이 모호하여 행정주체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.

- 문 11.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요건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.
 - ③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.
 - ④ 광역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으나 기초 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만 존재한다.
- 문 12.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아닌 것은?
 - 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 - ② 양곡의 수급 조절
 - ③ 가축전염병 예방
 - ④ 중소기업의 육성
- 문 13.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 하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도 조례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.
 - ② 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
 - ③ 재외국민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갖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없다.
 - ④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대상이 아니다.
- 문 14. 현행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.
 - ②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.
 - ③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아니한다.
 - ④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- 문 15.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지방의회의 적극적 관여가 배제된다.
 - ②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다.
 - ③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.
 - ④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경비를 부담한다.
- 문 16.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도에 두는 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.
 - ② 도의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도지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 - ③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도의회는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다.
 - ④ 도는 타 시·도에 두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다.

- 문 17.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능률과 효과의 면에서 사전적 통제가, 민주와 자율의 면에서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.
 - ②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.
 - ③ 주무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를 태만하게 할 경우 즉시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한다.
 - ④ 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하여 행정적 통제가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.
- 문 18.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중층제와 비교하여 단층제의 장점 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 - ①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억제한다.
 - ②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한다.
 - ③ 권한과 기능 중첩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.
 - ④ 이중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.
- 문 19. 오늘날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.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결정자 이며 또한 생산자인 공급방식으로 옳은 것은?
 - ① 계약방식(contracting-out)
 - ② 허가방식
 - ③ 사무위탁
 - ④ 이용권 지급(vouchers)
- 문 20.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위원을 둔다.
 - ③ 기초지방의회는 의원이 최소 13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④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.